

2 정부 정책 동향 (6. 6~6. 13)

금융감독위원회(6.6): 5대 그룹 자금 운용 실태 조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5대 그룹 부실 계열사도 퇴출시키기로 함에 따라 이들이 조달하고 있는 자금을 대출, 회사채, 기업어음 등 종류별, 그리고 은행, 증권, 투신, 보험 등 금융기관별로 점검할 예정
경제장관 간담회(6.6): 중소기업 부도 처리 사전 협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다수의 은행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이 부도에 처할 경우 반드시 은행간 협의를 거치도록 함 - 또한 연말까지 지원하기로 했던 신규 대출 자금 12조 원을 10월까지 앞당겨 지원
기획예산위원회(6.7): 정부 산하단체 경영 혁신 방안 마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454개 정부 산하단체를 민영화, 통폐합, 재정 지원 중단, 인력 및 조직 감축 등의 경영 혁신으로 약 절반을 축소할 방침
재정경제부(6.7): 투신사 보유주 의결권 행사 허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부 대주주가 기업 경영을 좌우하는 것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목적 - 다만 투신사 및 특수 관계인이 특정 기업을 계열사로 편입하려는 경우는 제한
재정경제부(6.8): 무역어음 제한인기간 폐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80일 이상이던 무역어음 제한인기간 제한을 폐지하여, 무역어음 할인 재원을 3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로 증가
공정거래위원회(6.9): 기업결합 심사 기준 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내외 기업간의 원활한 M&A를 통한 구조조정 촉진이 목적으로, 1사 50%, 3사 70%의 시장점유율 기준은 유지하되 예외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함
재정경제부(6.10): 조세감면규제법 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기간을 내년 6월까지 1년간 연장하고,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부채 탕감시 세제 혜택
기획예산위원회(6.10): SOC 투자 외국인 소유 허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SOC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민자유치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, 외국인이 직접 건설할 경우 최장 50년간 소유권 행사 가능
산업자원부(6.11): 에너지 관련 세제 개편 방안 마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휘발유 등 에너지에 붙는 특소세, 교육세, 교통세 등을 에너지세로 통합 - 에너지세를 산정할 때 주행세 및 환경세 개념을 적용
재정경제부(6.12): 외국인투자촉진법 입법 예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소기업 고유 업종 참여를 허용하고, 외국인 지분이 50% 미만인 기업은 내국법인으로 간주하여 신문방송업 등 투자 제한 업종에 진출 가능

(곽 용 선 yskwak@hri.co.kr ☎724-4058)